

경제주평

-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를 위해 최소 9.8조 원 필요

목 차

■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를 위해 최소 9.8조 원 필요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경제 여건 점검	2
3. 2.0% 성장을 위한 추경 규모 추정	4
4. 시사점	8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신 지 영 연 구 위 원(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연 구 위 원(2072-6248, syroh@hri.co.kr)
주 원 경제연구실장(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 잠재성장률 수준 복구를 위해 최소 9.8조 원 필요

■ 개요

2025년 한국 경제가 1%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추경 편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듬해에 경제성장률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 최근 경기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경기 여건 및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재정승수 추정을 통해 2% 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경제성장률 >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경제 여건 점검

최근 국내 경기 여건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건전성 또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추경 편성은 단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경제는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된 상황이다.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영향으로 0.1%(전기비)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0% 안팎의 성장에 그쳤으며,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한 수출(통관 기준)은 2025년 3월 20일 현재까지 연간 누계 $\Delta 2.6\%$ 를 기록하면서 외수 경기 악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경제 상황은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의 추가경정예산 요건 중 '경기침체'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최근 일련의 환경 변화상에서 '대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관세전쟁)', '자연 재난(영남 지역 산불)'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5년 한국 경제가 1%대 중반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 GDP 성장률을 3년 연속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성장률의 추세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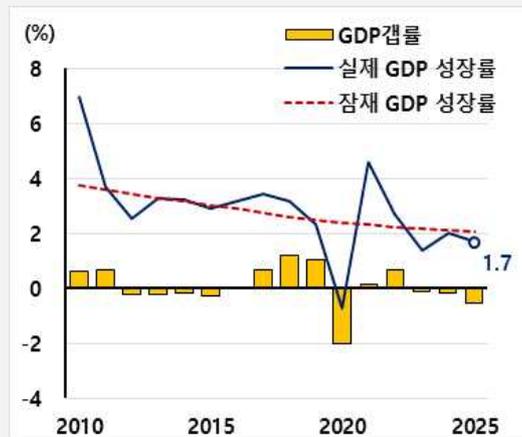
한편, 현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추경은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D1) 및 일반정부(D2) 부채 비율은 각각 46.9%, 55.2%로 여타 국가 대비 안정적 수준이며, 관리재정수지도 전년 대비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추경이 실행된다면 국가부채 증가 및 이로 인한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기비 기준.

< GDP갭률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GDP갭률 = \frac{실제\ GDP - 잠재\ GDP}{잠재\ GDP} \times 100.$

■ 2.0% 성장을 위한 추경 규모 추정

재정승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 경제성장률을 약 0.3%p 올려 2.0%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9.8조 원 규모의 세출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24.12.)에 따르면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7%로 전망되어 추세선 이탈 방지를 위한 성장률(2.0%) 달성을 위해서는 0.3%p의 추가적 성장이 필요하다. 경제성장률 0.3%p 상승을 위해 2024년 실질 GDP(2,289조 원) 기준으로 약 6.9조 원의 증가가 필요하며, 본 연구원의 재정승수(0.698)를 통해 산출한 필요 재정지출 규모는 약 9.8조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추경 분야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분야인 민간소비 및 일자리 창출 등 관련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지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SOC 등 정부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추경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美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추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영남 지역의 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한편, 세입 경정의 경우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 대비 현 경기 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규모는 약 8.3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 세입예산안(24.8.) 기준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2025년 3월 현재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은 1% 중반으로 하향되었다. 최근 국세 수입 진도율이 전년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국세탄성치 등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분에 따른 국세수입을 전망하면, 약 8.3조 원의 세수 결손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경제 전반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밖으로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대규모의 자연 재해를 겪은 영남 경제권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적시성을 확보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가장 시급하게는 영남 지역 자연 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내수 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경의 누손효과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의 정책적 공조가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보수적인 세입 전망을 통해 세수 부족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재점검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1. 개요

- 2025년 국내 경제가 1%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확대
-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추경 편성으로 위기를 극복, 다음 해에 경제성장률이 반등한 경험이 존재
 - 과거에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거나 미약하였던 시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특히, 2020~22년 적극적인 추경은 위기 대응에 유효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최근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큰 상황
 - 여야 모두 최근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3월 18일에는 3월까지 정부에 추경 편성안 제출을 요구하기로 합의함
 - 통상 정부안 제출부터 실제 집행까지 2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집행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가 견해차(여당 15조 원, 야당 35조 원)를 보이면서 추경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경기 여건 및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2.0% 성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추정

<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경제성장률 >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2. 경제 여건 점검

○ 최근 국내 경기 여건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건전성 또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추경 편성은 단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현재 국내 경제는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된 상황
 -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영향으로 0.1%(전기비)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0% 안팎의 성장에 그침
 - 최근에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둔화 우려마저 심화됨
 - 2025년 1월 생산·소비·설비투자의 증가율(전년동기비)은 각각 △3.5%, 0.0%, △3.1%로 전반적인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은 △10.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외수 경기 악화 가능성이 확대됨

- 이와 같은 국내 경제 상황은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1)의 추가경정예산 요건 중 '경기침체'에 해당되며, 이외 '대의 여건에 중대한 변화', '자연 재난'의 요건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기비 기준.

< 주요 경제 지표 >

구분	'24.1	'24.11	'24.12	'25.1
전산업생산	6.9	-1.0	0.6	-3.5
소매판매	-1.3	-2.6	-2.5	0.0
설비투자	3.6	1.6	10.5	-3.1
건설기성	17.2	-12.3	-7.4	-27.3
건설수주	-35.3	67.9	-12.4	-25.1
수출	18.1	1.3	6.6	-10.1
수입	-7.7	-2.5	3.3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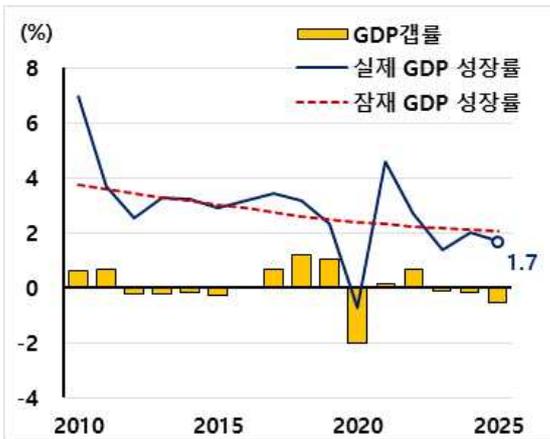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1)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또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도 추경 편성이 필요
 - 2025년 국내 경제가 1% 중반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 GDP 성장률을 3년 연속 하회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성장률의 추세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함
- 한편, 현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추경은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
 -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D1) 및 일반정부 부채(D2)²⁾ 비율은 각각 46.9%, 55.2%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임
 -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GDP 대비 -3.6%로 재정 준칙 기준(GDP의 3% 이내)을 초과하였으나 전년에 비해 개선됨
 - ※ 관리재정수지/GDP 비율(%): '20년(△5.4) → '21년(△4.1) → '22년(△5.0) → '23년(△3.6)
 -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추경이 실행된다면 국가부채 증가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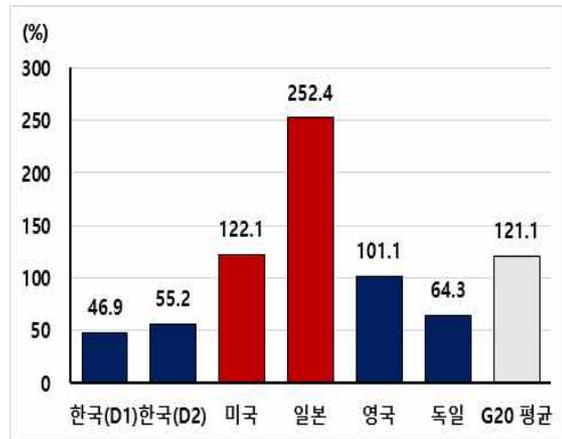
< GDP갭률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GDP갭률 = \frac{실제 GDP - 잠재 GDP}{잠재 GDP} \times 100$.

<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및 부채 >



자료 : 기획재정부, IMF.

주 : 국제 비교 시에는 국가채무(D1) 대신 일반정부 부채(D2) 활용.

2) 국가채무(D1)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괄한 통계이며,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한 통계.

3. 2.0% 성장을 위한 추경 규모 추정

○ 재정승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 경제성장률을 0.3%p 올려 2.0%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9.8조 원 규모의 세출 추경이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2013)의 모형을 통해 분석한 현시점에서의 재정지출 승수는 0.698로 추정

- Barro and Redlick(2012)의 모형을 바탕으로 식(1)을 추정하였으며, 데이터는 한국의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활용함
- y 는 1인당 실질 GDP, g 는 1인당 실질정부지출, τ 는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며, X 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 그룹(전기 실업률, 해외부문 충격(미국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정책불확실성지수 변화)을 의미
- 분석 결과 재정승수는 0.698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지출이 10조 원 증가할 경우 실질 GDP는 약 7.0조 원 증가함을 의미함

$$(y_t - y_{t-1})/y_{t-1} = \beta_0 + \beta_1(g_t - g_{t-1})/y_{t-1} + \beta_2(\tau_t - \tau_{t-1}) + X_t + \epsilon_t \dots \text{식 (1)}$$

- 재정승수를 반영하여 추정한 한국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위한 세출 추경 규모는 약 9.8조 원인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7%(HRI, '24.12.)로 전망되어 추세선 이탈 방지를 위한 성장률(2.0%) 달성을 위해서는 0.3%p의 추가적 성장이 요구됨
- 경제성장률 0.3%p 상승을 위해 2024년 실질 GDP(2,289조 원) 기준으로 약 6.9조 원의 증가가 필요함
-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의 재정승수(0.698)를 통해 산출된 필요 재정지출 규모는 약 9.8조 원 수준임
- 주요 기관의 재정승수 및 산업연관표상 정부투자 및 소비 유발효과 등에 따른 결과와 메타분석 시에도 재정지출 규모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³⁾

3) 산업연관표(2022년 연장표)의 정부 소비 및 투자 부가가치유발계수(비중은 각각 78.7%, 21.3%로 가정)를 활용하여 성장률 0.3%p 상승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규모를 산출한 결과, 8.1조 원으로 분석됨.

< 주요 기관 재정승수 추정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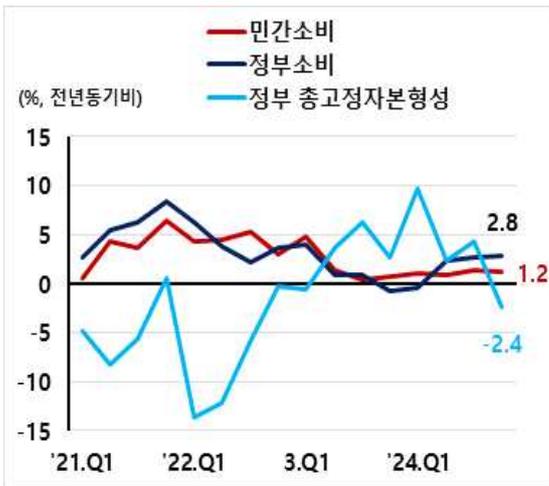
기 관	재정승수
현대경제연구원(2025)	0.698
한국개발연구원(2022)	0.2~1.07
한국은행(2020)	0.2~0.85

- 자료 1) 이강구,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22-02.
 2) 한국은행,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조사통계월보」, 2020-08.
 주 1) 현대경제연구원 재정승수 t값은 2.05(5% 유의구간에서 유의), Adj. R-square 0.49이며,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위기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로버스트 추정함.
 2) 한국개발연구원은 1차년도 기준으로, 이전지출(0.22), 정부투자(0.96), 정부소비(1.07)임.
 3) 한국은행은 1차년도 기준으로, 이전지출(0.2), 정부투자(0.64), 정부소비(0.85)임.

- (경기 침체 대응) 세출 추경 분야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분야인 민간소비 및 일자리 창출 등 관련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
 - 한국 경제에서 민간소비는 내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하반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됨
 - 민간소비 증가율이 0%대의 함정에서 탈출하여 1%대 이상의 증가율을 회복한다면, 내수 경기 반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민간소비와 관련된 분야의 지출 확대를 통해 소비심리 개선과 소비 여력 제고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재정지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SOC 등 정부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추경이 필요
 - SOC 등 정부투자는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특징이 있어 과거 추경에 다수 포함된 바 있음
 - 2024년 4분기 정부투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 SOC는 전 분야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감소함
 - 내수 동력이 약화한 현 상황에서 SOC 추경 편성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대의 여건에 중대한 변화 대응) 나아가 美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대응 여력 제고를 위한 추경이 고려될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2024)에 따르면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5~0.6%p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1930년대의 대공황 사례와 같이 세계 경제가 전면적인 관세 전쟁에 들어서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1.1%p 감소(시나리오 5)하는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함
- (자연 재난 대응) 특히, 최근 영남 지역의 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
 - 과거 자연재해 추경의 사례는 2002년(태풍 루사), 2003년(태풍 매미), 2006년(태풍 에위니아) 등이 있음

< 민간소비 및 정부 소비 · 투자 >



자료 : 한국은행.

< 2025년 총지출 분야별 자원 배분 >

분야	규모(증감액)
보건·복지·고용	248.7(11.1)
교육	98.5(3.3)
문화·체육·관광	8.8(0.1)
환경	13.0(0.5)
R&D	29.6(3.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0.2)
SOC	25.4(△1.0)
농림·수산·식품	25.9(0.5)
국방	61.2(1.8)
외교·통일	7.7(0.2)
공공질서·안전	25.0(0.6)
일반·지방행정	110.7(0.2)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단위는 조 원, 증감액은 '24년 대비.

○ 세입 경정의 경우에도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 대비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규모는 약 8.3조 원 수준으로 추정

-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6회의 추경 시 경기 상황 악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약 다섯 차례의 세입 경정 편성

- 정부는 2009년, 2013년, 2015년, 2020년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 등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과 가계 소득 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세수 실적 악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다섯 차례의 세입 경정을 편성함
- 각 시기 세입 경정은 약 5조 원에서 15조 원 규모였으며, 2013년을 제외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 세수 결손(초과)액(조 원): '09년(0.6) → '13년(△8.5) → '15년(2.0) → '20년(5.8)

- 2023년 이후 세수 결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점을 반영하면 약 8.3조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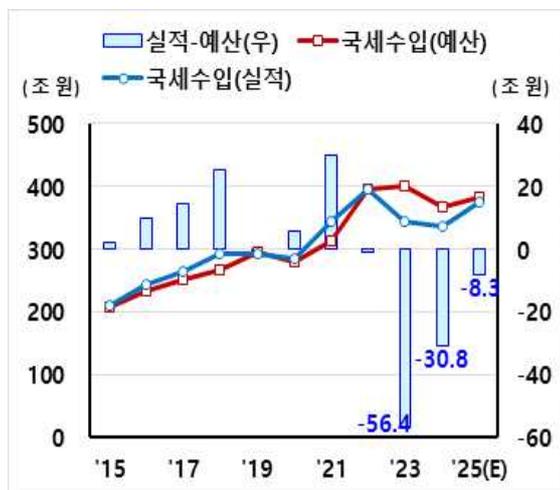
- 정부 세입예산안('24.8.) 기준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경상GDP 4.5%)였으나, '25년 3월 현재 주요 기관 성장률은 1%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됨
- 국세수입 진도율은 '25년 1월 12.2%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4년 동월(13.5%) 및 최근 5년 동월(12.6%)과 유사한 수준임
- 국세탄성치 등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 경제성장률 대비 현시점 하향 조정치(HRI, 경상성장률 3.7%)를 반영하여 국세수입 전망을 조정하면, 약 8.3조 원의 세수 결손 보전이 필요함

< 2006년 이후 세입 경정 >

시기	주요 내용
2009	(규모) 11.2조 (성장률) 0.8% (배경) 금융위기로 인한 세수 급감
2013	(규모) 12.0조 (성장률) 3.3% (배경) 경기 부진 지속 등
2015	(규모) 5.6조 원 (성장률) 2.9% (배경) 메르스로 인한 경제 충격
2020	(규모) 14.6조 원(1차+3차) (성장률) △0.7% (내용) 성장률 하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반영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종합.

< 최근 세입 결손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 재정.

4. 시사점

- 2.0%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약 18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추경 편성 이후 빠른 추진을 통해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첫째,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적시성을 확보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미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로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까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짐
- 또한, 재정 당국이 약 75%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계획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하반기 재원 부족이 보완될 것으로 보이며,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해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가능함에 따라 경기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추경이 상반기에 편성되더라도 편성 시기와 투입 시기 간의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 그 효과는 빨라야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른 시일 안에 추경 편성을 결정하고 국회 의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가장 시급하게는 영남 지역 자연 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내수 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는 자연재해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영남 지역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지출이 필요함
- 민간소비 제고 효과가 큰 노동, 보육, 가족 등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

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등 민간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SOC 분야 추경을 통해 현재 악화된 건설경기 반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부양 효과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 경기침체가 일부라도 해소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가능할 것임
- 한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인적자본의 확충, R&D 투자 등의 분야도 함께 고려될 필요

셋째, 추경의 누손효과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의 정책적 공조가 지속되어야 한다.

-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금리인하 기조 유지와 기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인 정책금융 활용 등의 금융정책을 재정 정책 기조에 맞추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최근 통화정책의 경우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더 시급한 현안(경기사이클 상의 침체)에 집중한 정책 운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금리인하 기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 가계부채 불안 등에 대해서는 대출 관리 강화 등 미시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

넷째, 보수적인 세입 전망을 통해 세수 부족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재점검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최근 2년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만성적 세수 결손은 재정절벽 방지를 위한 빈번한 추경 편성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재정 건전성까지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됨

- 세수 결손은 경기 회복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이 배경이 되는 만큼 보수적인 경기 및 세입 전망을 통해 세수 결손 발생을 예방할 필요
- 한편, 추경은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 국가부채 증가와 장기금리 상승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추경 편성과 동시에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유도해야 함

< 참고 문헌 >

Barro, H. Robert and Charles J. Redlick, 'Macroeconomic Effects from Government Purchases and Tax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 2011, pp. 51-102.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국회예산정책처, 2024.10.

이강구,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22-02.

한국은행,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조사통계월보, 2020-08.

현대경제연구원,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현안과과제, 13-17, 2013.03.26.

현대경제연구원, '성장률 3% 위해 20조 원 추경 필요하다', 경제주평, 15-25(통권 646호), 2015.06.19.

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 노믹스 2.0」 과 한국 경제', 경제주평, 24-18(통권 976호), 2024.11.07.

현대경제연구원, '내수 경기 부진 속 외수(수출) 불확실성 급증 -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판단(2025년 1분기)', 경제주평, 25-03(통권 982호), 2025.03.04.

HRI

신 지 영 연 구 위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